

# 한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고



글 · 이 태 훈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병원장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는 그동안 많이 변해왔고 또한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와 개선 노력의 결실로 취약한 복지기반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개선됐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적잖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개혁과 혁신 모델이 의료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혁과 혁신 드라이브 정책이 기존에 자리 잡은 보건의료 시스템과 제도까지 위축시키거나 희생시키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제공자와 수요자를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서로 간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또 보호하고 보완하는 관계임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 정책 입안시에도 이 점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금 정부는 ‘개혁과 혁신’의 케치플레이즈 아래, 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변화무쌍하게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감안할 때, 필수불가결한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는 개혁과 혁신만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큰 틀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발전하고 성공하는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존해온, 그리고 오랜 시간 계승되어온 제도와 시스템, 정책으로도, 그리고 그것의 점진적인 손질과 보완을 통해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뒤엎는 개혁과 혁신에 앞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제도나 법규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장점마저 훼손하고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까지 그 토대를 다져왔기에,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현상에 비쳐볼 때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일거에 수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제도 전체를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소 진부함이 있더라도, 보건의료제도는 혁신보다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서히 준비하면서 의료제도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 연수 후 귀국해서 길병원에 근무할 때, 연수 시 만났던 한 지인이 우리 병원을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저는 “우리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과감한 혁신을 통한 변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대뜸 “왜 변하려고만 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변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재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병원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보완해 계승 발전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 급격한 성장보다는 진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혁신을 통한 변신에서 정답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상을 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간과해선 안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제공자들을 옥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복지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즉 의료제공자들을 규제에서 자

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외부 규제보다는 자율정화에 무게를 실어 보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의료제공자와 수혜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양쪽 모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나가는 절차가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보건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점진적인 진화를 통한 의료정책의 계승 발전 노력과 의료제공자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함께 정부 당국의 시각과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책이라 하면,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각계 각층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가 어렵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언제나 ‘needs’ 가 ‘resource’ 를 앞지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건 완전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답이 없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소신이 마치 정답인 듯 관철시키려는 접근방식은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실행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적 정책이 그렇지만 완벽한 보건의료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료시장과 정부 당국간의 사이에서 어떤 보건의료시스템이 최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기간에 혁신을 통해 정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제공자와 수혜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양쪽 모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나가는 절차가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상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차곡 차곡 쌓여온 기존의 의료질서 근간을 흔들고, 일거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혁신적 사고와 정책은 일종의 ‘실험’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기관에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며, 정책 입안자들도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KHA**